

# '구인난' 한식당·호텔·콘도업도 이달부터 外人 고용허가 신청 가능

고용부, 2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한식당, 100개 지역서 주방보조원 호텔·콘도, 주방보조·건물청소원 서울·부산·강원·제주서 신청 가능

앞으로 한식당과 호텔, 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 취업비자)에 대한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이번 2회차 도입 규모는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2만5906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4955명), 서비스업(4490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조선업(1824명) 순이다. 초과



지난해 6월 외국인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컸던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확대했었다.

고용허가 신청은 한식 음식점의 경우 주방보조원에 한해 서울·부산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

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회차 신청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22일~28일까지,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29일~6월4일 진행된다.

올해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농식품부, 강원도 새 사과산지 육성 전략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서 조성

정부가 기후변화 여파로 재배지가 북상함에 따라 양구·평창 등 강원도를 새 사과 산지로 키운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유통 구조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신규 산지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강원지역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 등 5대 산지 면적을 기존의 2배(2023년 931ha·헥타르→2030년 2000ha)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지자체 사업을 연계한 스마트 과수원 확대와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유통 단계 단축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사과·배 등 유통비용 10%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자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하는 방안이다.

사과의 경우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자 직거래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해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선 재해예방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사과 10대 주산지 중 9개소, 배 10대 주산지 중 6개소 등 20곳의 위험 지역에 우선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약재배 확대 및 관리방식을 개선한다. 계약재배는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 수급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생산량의 30%(사과 15만t, 배 6만t)까지 확대해 명절 수요의 50%, 평상시 수요의 25%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K-푸드 수출, 유럽·美 두 자릿수 증가율

(각각 27.4%, 16.7%)

수출액,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전년비 3.4% ↑... 22.7억달러 中·日·서포 지역 수출 줄어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에 달했다. 다만 중국과 일본, 서남아시아 지역 수출은 줄었고, 아세안은 소폭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지난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2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지난 2021년 1분기 19억9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분기(22억2000만 달러), 2023년 1분기(21억8000만 달러) 등 호조를 보여 왔다. 올해 1분기에 이를 더 넘어선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시장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작년 1분기 1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 1억6500만 달러로 2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도 3억800만 달러에서 3억5200만 달러로 14.2% 늘었다.

농식품부는 "K-푸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 아세안, 유럽"이라며 "1분기 기준 제1위 수출시장(국가 기준)은 미국으로,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15.7%)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바이어 초청 K-푸드 수출상담 행사의 모습 /농식품부

또 "유럽 지역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했다. 미국·유럽 시장에서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비건·글루텐프리 등 건강식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한류 인기와 K-푸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세안 시장(4억6400만 달러)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공식품 중에는 라면(30.1%)과 쌀 가공식품(34.0%)이, 신선식품 중 포도(21.8%)·김치(6.1%)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라면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고르게 수출이 늘고 있다"며 "특히 2023년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 규제가 해제된 유럽 시장 대상 수출액도 높은 성장세(34.8%)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기계·스마트팜 수출 시 무역보험 우대

산업부-농식품부 협업... 오늘부터 시행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기계와 스마트팜 수출시에도 무역보험 우대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와 스마트팜 설비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이날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 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 우대를 적용받는다.

국내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 수출액은 2022년 460만달러에서 2023년 1억4300만달러로, 농기계 수출은 2020년 10억3000만달러에서 2023년 15억3000만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스마트농업 세계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2년 162억달러에서 2028년 254억달러로 연간 9.4% 성장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해수부, 성어기 맞아 中 불법조업 단속 강화

4월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정부가 이달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 달간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2일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단속에서는 한국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수출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

획이다.

특히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5~31일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